

■ '금융 소외' 저소득층 지원 강화 내용

'교육비 대출' 돈 벌때까지 상환 유예

25만명 교육비·의료비·창업자금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6,400억원 신규 혜택

정부는 5일 열린 '대부업 정책협의회'에서 대부업 이자율을 내리고 불법 대부업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대부업 이용이 어려워지는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과 은행·보험사 휴면예금, 생명보험사 사회공헌기금 등을 이용해 25만명의 금융소외계층에게 교육비, 의료비, 창업자금 등으로 6천400억원 가량을 우선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 개정 및 기구 설립을 서두르기로 했다.

◇ 1천500억원 무보증 소액대출= 정부는 우선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계층의 창업·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1천5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바탕으로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딧·Micro-Credit)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민간 주도의 4개 마이크로크레딧 특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규모가 4개 기관 통틀어 94억원에 불과하다.

정부 주도 마이크로크레딧은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기관의 창업·취업 지원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창업·자활 성공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다.

정부는 아울러 사금융 이용자의 대부분이 교육비, 의료비 등을 이유로 급전 마련에 나섰다라는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소외계층의 교육비, 의료비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비와 관련해 정부는 우선 연간 9만명의 저소득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시점을 소득 발생시점과 연계한 장기 교육비 대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 교육비 대출이란 저소득 고등학생에게 연간 200만원, 총 6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를 대출하고 본인이 직업을 구해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어서릴 때까지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다.

아울러 현재 중저소득층 대학생 50만명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이자 부담도 오는 2학기부터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저소득층이 긴급한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대상자 하위 30% 중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10만여명을 대상으로 단기·적정급리로 의료비를 대출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지난해 3월 도입된 위기상황의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 기준도 최저생계비(4인 기준 121만원)의 130%에서 150%로 올려 1만명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 개인 기부금 세제 인센티브= 정부는 이런 방안이 실시되면 기존 대상자 외에 추가로 약 25만명에게 6천400억원 가량이 신규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100억원(1만명), 장기교육비 대출제도 1천800억원(9만명), 의료비 대출제도 2천억원(10

만명), 무보증 소액대출 1천500억원(7천500건), 소액보험 1천억원(5만명) 등이며 학자금 대출 이자 감액에 필요한 458억원(2008년도분, 35만명)은 이미 예산에 반영된 상태다.

정부는 학자금 대출 외에 긴급복지지원 확대에 대한 소요재원도 정부 재정에서 추가로 지원하되 교육비와 의료비 대출, 무보증 소액대출 및 소액보험에 필요한 6천300억원은 사회투자재단과 은행·보험 등의 휴면예금, 생명보험사 사회공헌기금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공익기금 등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7월 중에 사회투자재단을 설립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휴면예금특별법이 마무리되는대로 특별법 또는 민법에 의해 휴면예금관리재단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공헌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익기금에 대한 기부문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개인기부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공익기금 기부대상 단체의 투명성 제고 등을 담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9월 정기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가계 빚 '사상 최대'

3월 말 현재 586조 5,000억원 주택대출 줄어 증가 폭은 둔화

지난 3월 말 현재 우리나라 총 가계 빚은 586조5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그러나 주택관련 대출 증가가 크게 줄어들면서 가계 빚 증가 폭도 둔화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1·4분기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외신구매(판매신용)를 합한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4조5천534억원(0.8%)이 증가한 586조5천169억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통계청의 2006년 추계 가구수(1598만8천599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가구당 부채 규모는 3천668만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1분기 가계신용 증가 폭은 전분기(23조1조원)의 5분의 1 수준으로 둔화했으며, 2005년 1분기 3조1천억원(0.6%) 증가 이후 2년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올들어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한데다 주택구입

수요가 위축되면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계신용 증가액을 부문별로 보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8천470억원으로 전분기 20조9천786억원의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특히 예금은행 대출 증가액은 전분기(14조6천230억원)보다 대폭 줄어든 2조4천178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예금은행이 취급한 대출 가운데 주택대출 비중은 44.1%로 2004년 1분기(40.6%) 이후 3년 만에 50%선 밑으로 떨어졌다. 소비 및 기타용도는 55.9%를 차지했다.

반면 할부금융사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여신전문기관 대출은 전분기 485억원 감소에서 7천265억원 증가로 돌아섰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 대출도 4천348억원이 증가해 전분기(3천713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연합뉴스

20~30대 12.3%가 "대부업체 이용 경험"

온라인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은 최근 자사 사이트 회원 및 방문객 중 20~30대 1천401명을 상대로 대부업체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12.3%가 "대부업체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대부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다시 이용할 의사를 물은 결과 36.6%는 '대부업체에서 다시 돈을 빌릴 의사가 있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63.5%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대부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70.5%가 '부정적이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현재 직장이나 취업준비를 포기하고 유명 사제업자로부터 대부업을 배울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36.6%가 '그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35억원짜리 명품 차 '부가티 베이론' '2007 슈퍼카 페스티벌'이 5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된 가운데 세계 최고가인 35억원짜리 명품 차(車) '부가티 베이론'독일 폴크스바겐사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차는 시속 408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며 국내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직장업무·가정 갈등 직장인 73%가 겪어

직장인 73% 이상이 직장 업무와 가정일 간의 갈등으로 괴로움을 겪은 적이 있으나 대다수 직장인들은 직장보다는 가정을 더 중시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에 따르면 최근 국내 직장인 663명을 상대로 '직장-가정간 갈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를 묻은 결과 조사대상자의 73.8%가 '그렇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 중에서는 78.4%, 여성 가운데에서는 67.7%가 직장가정 사이에 갈등을 겪어왔다고 답했다.

직장-가정간 갈등을 경험했다는 답변의 비율은 무자녀 응답자(69.5%)보다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87.0%) 중에서, 배우자 중혼자 직장생활을 한다는 응답자(68.9%)보다 맞벌이를 하는 응답자(87.0%) 중에서 더 높았다.

'직장과 가정 둘 중 어느쪽을 더 중시하는가'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85.1%가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직장-가정간 갈등을 촉발하는 주된 요인(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초과근무'(51.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기업 구조조정·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20.4%), '잦은 회식'(14.5%), '배우자의 소득'(12.2%), '가정 내 남녀 역할' 및 '자녀양육 책임'(각각 11.3%)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증시 변동 극심...매매 신중하게

전문가들 조언

증권시장이 최근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지난 주말부터 장중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증권 전문가들은 비록 시장이 활황장세를 구가하고 있지만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과 최근 급락세를 보인 중국시장의 불안 등으로 투자심리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추격매수보다는 신중한 매매전략을 취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5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6월 들어 일중 변동성은 평균 1.97%로 4월과 5월의 0.93%와 0.99%에 비해 배나 커졌다.

장중 최고지수와 최저지수의 차인 일중 변

동성은 지난 1일과 4일에 2.18%와 1.77%나 됐다. 이는 최고치와 최저치 간격이 거의 30포인트 정도나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5일에도 코스피지수의 일중 변동성은 1.43%로 24.96포인트나 등락을 거친 끝에 결국 4.60포인트(0.26%) 상승한 1,742.19로 장을 마쳤다.

삼성증권 오현석 투자정보파트장은 "매수세력과 매도세력의 치열한 매매공방으로 인해 시장이 불안정한 급등락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변동성이 커진만큼 투자자들이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장세에서는 지수보다 개별종목을 중심으로 신중한 매매패턴을 갖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우증권 조재훈 투자분석부장은 "이른바 전문투자자인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지수상승에도 공격적인 매수를 자제하고 종목에 따라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등 최근들어 상당히 신중한 매매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따라서 개인투자자들도 나름대로 정한 투자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신중한 매매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중심을 잃을 경우 상승시 추격매수하거나 하락시 덩달아 매도하는 등의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증권 오 파트장은 "지수가 이미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수에 배팅하기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매매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건설·금융주에 대한 접근이 유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장필수기자 bungy@

순한 소주 이어 '순한 담배' 인기

타르 0.5mg '더 원 0.5' 내수 판매량 6.36%

알코올 도수 20도 미만의 저도(低度) 소주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담배 시장에서도 타르 함유량을 0.5mg으로 낮춘 순한 제품이 애연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5일 KT&G에 따르면 타르 함량을 0.5mg으로 낮춘 '더 원 0.5' 제품은 5월 한

달간 1천881만갑이 팔려 전체 내수 판매량의 6.36%를 차지했다.

이는 모 브랜드인 '더 원'(타르 1mg) 제품의 5월 판매량 1천670만갑(5.65%)을 뛰어넘는 것으로 출시 직후인 지난해 9월 '더 원'과 '더 원 0.5'의 판매량 비중은 각

각 7.35%와 5.55%였다.

'더 원 0.5'에 이어 지난달 2일 국내에서 두 번째로 출시된 타르 0.5mg 제품인 '에세 순 0.5' 역시 5월 한 달간 1천934만갑(6.54%)이 판매돼 모 브랜드인 '에세 순'의 3천34만갑(10.26%)에는 못미쳤지만 애연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에세 순 0.5'와 '더 원 0.5'의 판매량 점유율은 KT&G가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40여개의 브랜드 중 '에세 라이트'(12.2%), '에세 순'(10.26%)에 이어 각각 3위와 4위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취발유·경유 관세 인하 추진

재경부, 할당관세 적용

재정경제부가 취발유나 경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주는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는 석유제품의 관세율을 낮춰 국내 정유업체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자본부는 국내 산업의 보호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쟁효과가 있을지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5일 "원유 뿐 아니라 석유제품의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과 관련해 산자부, 공정위와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며 "국무회의의 일정을 고려해 늦어도 내 주 초에는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석유제품 할당관세에 대한 장단점이 맞서고 있어 아직 방안을 확정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그러나 1일 열린 관계부처 회의

에서 고유가를 고려해 원유의 할당관세 1%를 유지하되 현재 할당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 석유제품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의 경우 기본관세는 3%지만 상반기까지 할당관세 1%가 적용되고 있으며 석유제품은 기본관세 5%가 적용되고 있다.

재경부가 추진하는 대로 석유제품에 할당관세 3%가 적용되면 원유와 석유제품의 관세는 2%포인트 차이만 나게 되므로 완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에는 원가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원유를 수입해 정제하는 정유업체는 국내 정유산업에 악영향이 미친다는 입장이며 산자부도 국내 산업을 고려해 재경부의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론적으로는 경쟁이 촉진될 수 있겠지만 경쟁에 따라 소비자가 혜택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다. /연합뉴스

수입차 5월 4,570대 신규 등록

월 최다 등록대수 기록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4천570대의 수입차가 새로 등록돼 또다시 월별 최다 등록대수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에 비해 25.0%, 전년인 지난 4월에 비해 10.3% 각각 증가한 수치다. 브랜드별로는 혼다가 678대로 가장 많이 등록됐으며, BMW 600대, 렉서스 588대, 메르세데스-벤츠 452대, 아우디 408대, 폴크스바겐 355대, 푸조 306대, 크라이슬러(크라이슬러·지프·닷지) 300대, 볼보 268대, 인피니티 232대, 포드(포드·링컨) 110대 등의 순이었다.

또한 모델별로는 340대가 등록된 혼다 CR-V가 '5월 베스트셀링카'로 꼽혔으며, 렉서스 ES350(240대), BMW 320(182대) 등

이 뒤를 이었다. 이로써 혼다는 2개월 연속 신규등록 1위 브랜드로, 혼다 CR-V는 25월 4개월 연속 1위 모델로 각각 꼽혔다.

베기량별로는 2천1~3천cc가 1천959대로 전체의 42.9%를 차지했으며, 2천cc 이하 1천190대(26.0%), 3천1~4천cc 993대(21.7%), 4천1cc 이상 428대(9.4%)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천867대(40.9%), 경기 1천133대(24.8%), 경남 859대(18.8%) 등 상위 3개 시·도가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광주는 지난달 62대(1.4%)의 수입차가 등록돼 수입차 점유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관계자는 "5월 수입차 등록은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신차효과 및 브랜드별 다양한 프로모션에 힘입어 역대 월별 최다 등록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새 차 증후군 권고기준 2009년 7월 시행

정부가 새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로 인한 새차 증후군을 막기 위해 권고 기준을 마련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5일 포름알데히드 등 새차 유독물질의 기준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새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했으며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2년마다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한 새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는 포름알데히드 250µg/m³, 벤젠 30µg/m³, 톨루엔 1000µg/m³, 자일렌 870µg/m³, 에틸벤젠 1600µg/m³, 스티렌 300µg/m³ 등이다.

이번 조치는 새차의 시트, 천장재 등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로 두통, 눈·피부 등의 따가움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향후 신차 제작시 내부 마감재를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량 또는 방출량을 최소화한 자재로 바꿔야한다.

또한 일부 사회 유명인사들이 특정 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한다는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번호매정의 경우 '1000', '2000' 등 선호도가 높은 번호를 따로 분류해 해당 번호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부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양지와 농촌 등에 보급된 '사발이 오토바이(ATV)'를 이륜차로 구분, 신고를 의무화해 무·과부 등의 따가움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